

오피니언

다산포럼

송재소



최근 일간지에서 흥미 있는 서평을 하나 읽었다. '로그아웃에 도전한 우리의 겨울'이란 제목의 책인데, 미국 뉴욕대학교의 미디어 생태학 박사인 저자 수잔 모사트 여사가 14세, 15세, 18세 세 자녀와 함께 호주 남서부의 외딴 마을에 있는 집에서 스마트폰, 아이패드, 컴퓨터, 게임기, TV 등 모든 디지털기기의 스위치를 끈 채 6개월간 생활한 체험담이다.

이 별난 실험을 하게 된 동기는 "컴퓨터 스크린에 진짜 삶(Real Life)을 차단 당한 채 살아가는 아이들의 모습이 걱정스러웠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온 가족이 정화(淨化)되기 위한 길"이라고 여겼다는 것이다.

6개월에 걸친 '디지털 금욕'의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아이들은 신문 읽기와 책 읽기, 일기 쓰기를 통해서 집중력이 향상되었고, 컴퓨터 스크린 앞에서 하던 상사를 함께함으로써 가족들과 깊은 대화를 나누며 친밀도가 증가되었다고 한다. 디지털기기에 의해 오염된 삶이 '정화'되기

시작한 것이다.

내에겐 수잔 여사의 실험이 남의 일 같지 않았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아닌가? 디지털기기는 현대문명이 우리에게 가져다준 선물임에 틀림없다. 디지털에 의해

서 일상생활의 모든 것이 빨라지고 편리해졌다. 그런데 이 '빠름'이 문제다. 사람들은 디지털기기에 길들여져 어느덧 속도를 미덕으로 여기게 되었다.

사진을 찍을 때에도 찻잔 화면을 그 자리에서 보아야 하고, TV 채널도 손으로 돌리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리모컨이 등장했다. 인터넷 접속은 빠를수록 좋다. 빠른 것이 좋긴 하지만 이렇게 미친 듯이 속도를 추구하다 보면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과속으로 인한 사고가 나게 마련이다.

이제 여기저기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지만 가장 심각한 사고는 인간 사고력의 저하이다. 무한 속도전의 와중에 휩쓸리게 되면 창조적 사고를 할 겨를이 없어진다. 기존의 지식을 머릿속에서 여유를 가지고 깊이 생각해야만 창조적 사고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 것인데, 손쉽게 빠른 인터넷식 지식 사냥만으로는 참다운 창조적 사고를 할 수 없다.

창조적으로 사고하려면 속도가 아닌 여유가 필요하다. '학자'를 뜻하는 영어 'scholar'의 그리스어 어원이 '여유'라는 의미를 가진 'scole'라고 한다. '여유'와 '학자'

격적인 논문을 생산해야 하는 지금과 같이 제도화된 학문 풍토에서는 제아무리 칸트인들 위대한 업적을 내기 어려울 것이라 생각된다. 강요받지 않고 방해받지 않는 여유로운 산책길의 사색이 칸트 철학의 모태(母胎)가 아니었을까?

앞으로 들어설 세종시의 모든 학교는 이른바 '스마트 스쿨' 시스템으로 운영된다고 한다. 학생들은 책과 가방 없이 등교하고 모든 수업과정은 전자 시스템으로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학생이 등교해서 교실 문 앞에 서면 문은 자동으로 열리고 알람판에 "철수야 안녕, 오늘 체육 수업시간에 배우는 것 알지?"라는 문자가 뜨는 식이다.

이런 스마트 스쿨 구축에 학교당 20억 원이 든다고 한다.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교육일까? 20억 원을 학교 폭력 예방에 쓰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온통 디지털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집요한 디지털의 유혹을 뿌리치고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이나마 '디지털 금욕'을 단행한 수잔 여사의 결단에 깊은 경의를 표하고 싶다.

<성균관대 명예교수>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죽음 부른 민주 국민경선 보완책 서둘러야

민주당 국민경선 선거인단 대리모집 의혹을 조사받던 전직 동장이 투신자살하는 등 국민경선제 폐해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애초 국민참여 기회 제공, 공 공천 배제 등 좋은 취지 이면에 내재돼 있던 동원·금권·관권선거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지난 26일 광주시 동구 계림1동 주민자치센터 옥상에서 전직 동장이 떨어저 숨진 것은 대리등록이 화근이었다. 이 동장은 이날 대리등록 의혹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구 선관위 직원들의 조사를 받던 중 화장실에 가겠다고 나간 뒤 투신했다.

선관위는 동구 세대인 명부, 특정후보 홍보물, 금융거래 통장 등 단서를 상향 조사하겠다고 한다. 이번 사건은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동구 선거판도는 물론 민주당 국민경선에도 상당한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과열 경선에 따른 불법 사례는 동구 뿐만 아니라 장성과 광주 북구에서도 경

찰에 적발되는 등 끊이지 않고 있다. 누가 선거인단을 많이 모집하느냐에 따라 승부가 갈리게 돼 있기 때문이다. 자발적 참여를 통해 정치혁명을 꾀하겠다는 민주당의 상황인식과는 거리가 먼 불법이 곳곳에서 자행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도입 당시부터 동원에 따른 폐단을 누차 지적했음에도 아무런 보완책 없이 시행하다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는 점이다. 동구 현장에서 수십 명에게 1만 원씩 출금된 통장 3개가 발견됐고, 공공도서관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니 누가 보더라도 금권·관권선거의혹을 떨쳐버릴 수 없는 일이다.

민주당은 한명숙 대표가 사과를 했다지만 이것으로 부족하다. 진상조사·당사자 조치·제도보완 등을 서둘러야 한다. 그래야만 국민경선 도입 취지를 살릴 수 있고 개혁공천에 대한 신뢰도 회복할 수 있다. 사법당국도 불법이 더 이상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해 엄히 다스려야 할 것이다.

여야 '뺨그릇 쟁기기'에 그친 선거구 획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27일 4·11 총선에 한해 의석수를 현행 299석에서 300석으로 1석 늘리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경기 파주, 강원 원주, 충남 세종시에서 1석씩 총 3석을 늘리고, 영·호남에서 경남 남해·하동과 전남 담양·곡성·구례를 인근 지역에 분할하여 2석을 줄인다는 게 주요 골자다.

이로써 지역구 수는 245석에서 246석으로 증가하고, 비례대표는 54석으로 현행대로 유지하게 된다. 이날 처리된 개정안은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면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된다.

그러나 우리는 이번 개정안 처리에 대해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적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의원 수를 되레 늘린데다 지역민의 반발을 무시한 채 통·폐합을 결정한 개정안은 '뺨그릇 쟁기기'가 아니고 무엇이었는가.

담양·곡성·구례 선거구만 하더라도 우리 정치권이 얼마나 비민주적이고,

비합리적인가를 여실히 보여 준다. 먼저 도시 선거구 보충을 위해 농어촌 선거구를 희생양으로 삼았다는 데 있다.

농어촌의 실정을 강그리 외면한 것도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인구가 급격히 줄면서 갈수록 폐쇄되고 있는 농어촌은 오히려 정치적 보호의 대상이다. 그런데도 '누더기 선거구'를 만들어 지역의 대표성이 사라지고 선거 때마다 지역간의 갈등만 유발해온 게 사실이다.

특히 이번 선거구 통·폐합은 여야 모두 공천과 예비 후보 신청을 받은 상황에서 이뤄져 후보자들이 지금까지 들인 노력이나 비용은 물론 새로운 환경에서 경쟁해야 하는 까닭에 그야말로 참담할 수밖에 없다. 지역민들 역시 선거판도 변화에 따른 혼란과 함께 참정권을 유린 당한 셈이다.

이번 통·폐합을 사실상 주도해온 민주당은 이제 더 이상 지역민을 우롱해선 안 된다. 민심이 마냥 민주당에만 있진 않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NGO 칼럼



임수연

2012년 한해는 선거로 시작해 선거로 끝날 분위기다. 이미 4월 11일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위해 지난해 말부터 그 열기가 서서히 고조되고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 열기가 과열양상까지 보이더니 광주에서는 선거인단 모집과정에서 자살까지 벌어지는 일이 벌어졌다. 그리고 오는 12월 19일에는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다.

이렇게 2012년에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미래세대를 열어갈 국가지도자를 선출하기 위해 60여 개 국가가 대선이나 총선을 치른다. 러시아는 3

월, 미국은 11월 대통령 선거를 치른다. 중국도 10월 지도부 교체가 예정되어 있다. 세계 주요국의 정치 지형 변화는 세계 각국의 평화와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번 선거는 참으로 중요하다. 우리에게 놓여진 중요한 과제를 풀어야 하고 전 세계적으로 손맛잡고 평화를 함께 만들어가야 하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이다.

그럼 우리에게 놓여진 숙제는 무엇인가. 그 첫 번째는 남북의 긴장관계를 녹이고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이루는 일이다. 그동안 우리가 쌓아왔던 민주주의와 경제 성장 등이 사상누각이 되지 않으려면 같은 게든 평화와 통일을 이끌어내야 한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숙제는 남북간의 사상을 넘어서 기필코 통일을 이루어 내야 한다.

두 번째는 우리 사회의 양극화 문제를 극

선거를 통한 희망만들기

복해야 한다. 갈수록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이 커져만 가고 있다. 양극화가 지속되는 이런 사회는 갈등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 갈등이 지속되는 사회에서 무슨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우리 사회가 어떻게든 양극화 문제를 극복하고 해결하는 데 힘과 지혜를 함께 모아야 한다.

남북의 평화와 통일, 양극화 해소 말고도 우리 사회는 지금 풀어야 할 숙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전 세계적 국가경계의 흐름 속에서 우리의 경제도 나관할 수 없다. 그리고 계층간 갈등과 비정규직문제, 청년실업문제, 그리고 노령인구의 급증으로 인한 문제 등을 헤아려야 한다.

또한, 농촌공동체의 붕괴로 인한 마을공동체 붕괴 및 식량문제, 더불어 지구온난화로 인한 전지구적 환경문제, 에너지 자원고갈에 대응할 대체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일도 우리 앞에 놓여진 다급한 과제이다.

이런 제반 문제를 극복하고 해결해나가기 위해서는 과연 누가 우리의 새로운 흐름, 새로운 분위기, 새로운 희망과 비전을 세우나 할 책임자인지를 냉철히 판단해야 한다.

환경활동하면서 절실히 느끼는 것 중 하나가 가치관이 올바른 사람이 정치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선출된 대통령이 어떤 가치관을 가졌느냐에 따라 우리의 활동은 네거티브활동으로 전락해야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 지난 4년이 그랬던 것 같다.

개인의 이익과 특정 계층의 이익, 그리고 빠르게 변화해가는 흐름을 인지하지 못하는 지도자를 뽑으면 우리의 미래는 지금보다 더 어렵고 힘든 상황을 벗어날 수 없다. 따라서 올바른 가치관과 세계사적 안목을 갖추고 진정 고통받고 억압받고 소외받는 이들을 대변할 수 있는 이들을 지도자로 선출해야 한다. 이제는 환경활동도 긍정적이지 않다. 이제는 환경활동도 긍정적이지 않다. 이제는 환경활동도 긍정적이지 않다. 이제는 환경활동도 긍정적이지 않다.

기고



양정식

오는 3월부터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0~2세 영·유아에게 보육료를 지급하게 된다. 날로 늘어나는 양육비로 시름이 깊은 가계에는 다소나마 부담이 줄고 출산장려 측면에서는 크게 환영할 만한 일이나 이로 인해 3279억원을 올해 추경예산에 반영해야 하는 지자체의 입장에서는 재원 마련이 발등의 불이다.

2005년 이후 저출산·고령화 시책과 함께 보육, 무상급식, 의무교육, 다문화정책 등 복지정책의 확대 추세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다. 민중·인권·평화도시를 표방하는 우리 광주시는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복지정책과 지방재정이 상생하는 길

맞춰 우리의 자녀가 짐ს 걱정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 무상급식'을 중학생까지 확대하고, 전국 최초로 '보육교사 파견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장애 여성들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산전 검진비'를 지원하는 등 시민 모두가 행복을 누리는 복지 공동체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그러나 복지서비스를 바라는 시민의 욕구가 증가하면 할수록 재정을 부담해야하는 지자체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광주시 올해 재정은 지난 2005년 2조 305억원에 비해 62%가 증가한 3조 2814억원이지만 같은 기간 사회복지비는 226%가 증가한 9737억 원이다. 이는 광주시 전체예산의 29.7%에 달하며 우리 시 자치구의 사회복지비는 이보다 높은 54.4%에 이르고 있다.

지방재정의 어려움은 조직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전국

244개 지자체 중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도 감당하지 못하는 단체가 50%가 넘는 123개이며, 광주시 또한 4개 자치구가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으며 자립도 역시 41.1%로 광역시 평균 55%보다 낮아 재정운영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실정이다.

그럼에도 정부에서는 지자체의 재정형편은 감안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된 복지정책 추진을 위한 비용부담만을 요구하고 있어 자칫 지방재정 건전성 근간이 흔들릴 수 있는 어려움에 처해 있다.

이에 필자는 시민행복을 위한 복지정책 추진과 지방재정에 어려움이 없는 상생하는 길을 제안해 본다.

먼저 재원부담이 수반되는 새로운 정책 도입시에는 재정손실액 사전대책과 함께 지방정부와 합의가 있어야 하고 2006년 개정된 지방교부세 법정 교부율 19.24%를 지방

재정 실정을 감안하여 상황 조정해야 한다. 국고보조금 지원의 경우에도 자치단체 간 재정여건을 고려하지 않는 일률적인 보조금 적용으로 인하여 복지재원의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는 만큼 지자체의 재정상황에 따라 차등보조율을 전면 재검토하여 지역복지 편차를 줄이는 방안도 모색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2005년 국가로부터 지자체로 이양된 67개 복지사업의 재정수요는 252%가 증가한 반면 이양사무 지원을 위한 분권교부세는 53% 증가하는데 그쳐 애초 지자체 간 재정력 격차해소와 재정균형 유지의 취지는 유명무실하게 되었다. 이에 노인, 장애인, 아동 등 분권사업을 중심으로 조기에 환원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업무조정 현실에 맞게 변경하는 것도 심도 있게 고민해 보아야 한다.

이러한 제안들을 바탕으로 중앙과 지방의 합리적 자원배분이 전제된 이후에 국가의 복지정책이 추진될 때 비로소 지역 간 균형발전과 함께 국민의 삶이 윤택하게 되고 중앙과 지방이 상생 발전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광주시 예산담당관>

포상금만 노리는 '비파라치' 활개...신고제 취지 흐린다

요즘 부모님이 사시는 아파트가 시골시골하다. 그 이유는 아파트 비상구 앞에 자전거나 기타 물건을 쌓아놓을 경우 비상구 폐쇄 행위 즉 불법행위가 되어 포상금을 노린 비파라치(비상구폐쇄를 사진으로 찍어 고발해 포상금을 받는 전문 신고꾼)가 사진을 찍어 고발을 했기 때문이다.

어머님은 식당을 운영하는데 배추나 무는 물론이고 여러 식재료를 운반하려면 그냥 들고 다닐 수는 없다. 어머님의 연세도 많으시지만 워낙 양도 많고 무겁기 때문이다. 그래서 평소 식재료 운반을 수레를 비상계단 옆 공간에 놓고 이용해 왔지만 최근 들어 아파

트 관리사무소에서는 혹시 비파라치들에게 걸릴 것을 우려해, 치위주길 당부했었다.

어머님은 삼마 이런 조그만 수레 하나를 누가 찍어 고발하겠다는 생각으로 그냥 방치해뒀던 모양이다. 수레가 있다고 비상탈출이 어려운 정도도 아닌 것 같은데 괜히 이런 것까지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까 싶어 무관심했던 것이다. 하지만, 결국 삼마가 사람 잡았다. 비파라치가 사진을 찍어 신고해 버렸기 때문이다. 어머니는 황의도 해보고 호소도 했지만 일단 고발이 접수된 것이기 때문에 소위 빠도 막도 못한 채 벌금을 물어야만 했다. 무거운 것을 들지 못하는 어머니로서

수레를 사용해야만 하고, 그것도 여가용이 아니라 생업용이기 때문에 비파라치에게 걸린 게 너무 억울하지만 별도리가 없었다.

비상구를 막음으로써 비상 탈출을 방해하기 때문에 다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에는 찬성한다.

하지만, 삼마 건물과 아파트 등을 돌며 한

가나 청소, 수리, 물건 반입 등으로 비상구 근처가 잠깐 어지럽혀진 틈을 타 사진을 촬영하는 아비한 신고꾼들이 활개치는 것은 정말 문제다. 즉 신고제의 취지를 망치며 포상금만 노리는 전문꾼들을 걸러내고 진정한 신고자를 엄선해야 할 것이다.

▲김규근·광주시 서구 쌍촌동

◆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6메일 opinion@kwangju.co.kr

無 等 鼓

197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은 '고졸 전성시대'였다. 당시 성적 상위자가 아니면 상고나 공고에 지원하는 원서를 아예 써주지 않았다. 전문계 고교생들은 졸업 전 은행이나 대기업에 취업하기도 했다.

그러나 1980년대부터 학력 인플레이션에 고졸자들은 '2류 인생'을 살아야 했다. 정부는 대학 인가증을 날발했고 어지간하면 모두 학사모를 쓸 수 있었다.

대졸자가 넘쳐나면서 고졸자는 차별의 대상이었다. 당장 월급이 꽤 차이 났다. 승진 때 대졸자에게 밀리는 것은 '당연하게' 받아들여졌다. 핸디캡을 극복하기 위해 고졸자들은 퇴근 후 치킨 밥을 이르고 야간대학을 노크해야 했다. 그러나 한 번 뒤집 격차를 쉽게 줄이기는 힘든 일이었다.

고용노동부가 전국 3만2000개 사업장을 조사한 결과, 2010년 고졸자의 시간당 임금 9944원으로 분석됐다. 대졸자 1만7170원의 57.9%에 불과한 액

다시 고졸자들에게 새로운 빛이 비치기 시작했다. 정부와 관공서, 대기업 등에서 고교 졸업자에 대한 문호를 확대한 것이다.

광주시는 최근 고졸 우대시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방공무원 기능인재추천제 도입과 함께 기술직 월 20%이상과 가능직 월 30%이상을 고졸자로 채용하기로 했다.

일단 고졸자들의 사회 진출에 숨통이 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임금과 인사차이가 철폐되지 않는다면 '고졸 르네상스'는 허구호일 뿐이다.

/박지경 사회부장 unipark@kwangju.co.kr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김유진 편집국장 김우현

1952년 4월 20일 創始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광)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매일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문화생활부 2200-661 편 집 부 2200-649 여론채우부 2200-621 정 경 부 2200-612 제 육 팀 2200-697 <대표 FAX 222-4918> 사 진 부 2200-693 사 회 부 2200-616 조 사 부 2200-571 <대표 FAX 222-4267> 전 산 팀 2200-685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홍보국 2200-54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광고매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다 지 국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기획사업국 2200-555 <F A X 02-773-9335>
---	---

※구독료 월정 10,000원(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